

# 녹색성장 시대의 주역, '녹색전문 중소기업' 키운다

녹색성장 정책이 그 동안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가 육성되고, 녹색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공공 녹색시장 규모가 두 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적 녹색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녹색성장. 이를 위한 녹색전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글 이상현(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1. 서론

경제와 환경이 상충되었던 과거 시절과는 달리, IT, BT 시대를 거치면서 환경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신성장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글로벌 온난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천명하면서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였다.

환경과 기업 경쟁력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로 전환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 전환점에 서 있는 듯하다. 즉, 기업들에게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과 신제품 생산이 대기업보다 유리하고, 특히 반도체, IT, 조선 등의 앞선 기술력을 녹색기술에 잘 접목한다면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위기도 상존한다. 자금과 기술력, 정보력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일부 선진기업들이 글로벌 녹색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범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녹색중소기업의 창업, 금융, 인력, 기술, 해외진출까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기업의 녹색경영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 2. 녹색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주요내용

### ① 녹색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우선 녹색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녹색연구기관의 창업지원역량을 강화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을 녹색창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녹색창업선도대학' 5곳을 지정하여 교수 및 연구원 등 예비창업자의 녹색창업 준비를 지원하고, 대학이 보유한 첨단장비와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녹색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멘토링, 마케팅 등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창업선도대학 내 녹색기술창업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녹색 특화기술 및 맞춤형 창업실무교육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녹색기술창업학교를 수료한 예비창업자

에 대해서는 기술창업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할 방침이다.

녹색벤처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제공을 위해 2011년까지 3개 대학 등에 '녹색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한다. 녹색신기술창업집적 지역으로 조성된 곳은 도시형 공장설치 허용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녹색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술 전문 연구기관은 녹색창업 촉진의 허브로 활용된다.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녹색특화 창업보육센터(BI) 확장·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술 전문 연구기관을 녹색창업선도대학과 함께 녹색창업 활성화를 위한 양대 축으로 삼아 나간다.

녹색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확대하고 범사회적으로 창업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한다.

오는 2013년까지 1조 1,000억 원의 녹색·신성장분야의 투자전문 펀드를 결성하고 광역권 별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한층 강화하며 녹색분야 전문가를 선발해 녹색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로 양성한다.

이 밖에도 녹색분야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내외 녹색창업 성공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알려 녹색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술창업 만물사전'을 통해 녹색기술 창업지원사업, 기술동향 등 녹색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② 녹색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실제로 지난해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녹색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응답기업의 81.3%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렇듯 녹색중소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해 지원에 있어서 금융지원은 필수이기에 정부에서는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정책자금의 집행이 업종 구분 없이 이뤄지던 방식에서 탈피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선정된 녹색·신성장 분야 육성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730억 원에 달하던 녹색·신성장 분야의 전용 정책자금을 올해 4,223억 원으로 대폭 늘렸고, 단순 용자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와 용자의 중간 성격인 성장공유형(메자닌) 대출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300억 원에 달하던 자금규모를 2011년에는 1,000억 원으로 확대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 분야의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각각 최대 70억 원(당초 30억 원), 90%(당초 85%)까지 확대키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한다. 아울러 녹색기술 인증기업 우대 보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그린 하이테크 특례보증'을 시행, 녹색인증기업 외에도 녹색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녹색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녹색 기술력 한도 가산제도에 따라 3억 원의 보증금액 한도 이내에서 추가 보증을 실시하는 등 자금조달에 대한 걱정 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녹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③ 중소기업 녹색인력 확보 지원

녹색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녹색전문 신규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재직자의 녹색전문성을 제고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자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전문인력 확보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녹색 산업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화 된 녹색인력의 대기업 유출이 심해지고 있어, 녹색 R&D, 녹색경영 등을 전문적 추진할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취업과 연계하는 녹색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재직자의 녹색 전문성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녹색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 신규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또는 단체를 지정해 '녹색전문 아카데미 과정(3~6개월)' 운영, 지역 별로 특화된 녹색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및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 전문과정을 개설해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과 연계한 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전문계고를 지정해 중소기업과 취업 협약을 체결하여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 현장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별 협력대학 3곳에 녹색산업 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녹색·신성장 분야 석사과정)'를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관련 기관에 태양광, 풍력 발전 등 24개 과정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재직자의 녹색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향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④ 중소기업 녹색기술력 확충 지원

녹색(환경)과 성장(경제)이 서로 상충되던 시대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핵심 요인은 바로 '녹색기술'이다. 획기적인 녹색기술의 개발은 기업의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세계 녹색기술 확보 경쟁 레이스에 뛰어들어 세계 시장점유에 전력을 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녹색기술력은 기업의 녹색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로 대기업에 핵심 부품 및 소재를 납품하는 B2B 기업이기, 그만큼 녹색 핵심 부품 및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색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처럼 기술과 자금, 인력 부문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스스로 녹색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과 R&D 지원 및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력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녹색기술 로드맵을 분석 및 보완해 9대 분야, 200개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선정하여 녹색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녹색기술 시장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 기술과제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R&D 및 수출전략 제시를 위한 R&D 기획지원이 확대되고 R&D 및 사업화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계·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획과제의 R&D 연계 지원 비율을 지난해 48.1%에서

오는 2012년까지 70%로 높이고, 국가 녹색기술 로드맵을 토대로 선정된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에 대한 R&D 지원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개발이 완료된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투·융자 연계형 제품화 R&D를 지원하고, 사업화개발(디자인, 사출·금형·목형, 신뢰성 인증, 생산설계) 단계에 소요되는 개발비를 지원하여 성장 병목현상을 해소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융자자금을 올해 1,580억 원에서 2011년에는 2,580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확대하고, 시중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과 연계해 R&D 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 융자지원(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부품 및 소재 분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대·중소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한다.

#### ⑤ 녹색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진출 지원

국내 녹색시장은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녹색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해외 녹색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령 글로벌 녹색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조차도 해외 녹색산업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선불리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국내 녹색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에는 '글로벌 녹색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녹색사업에 대한 현지정보 제공 및 대·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해외진출 협력 파트너를 연계해 주는 등 국내 녹색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해외에

는 거점 별로 녹색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녹색 정보수집과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 등 국내 녹색중소기업의 해외 녹색시장 진출을 돕는다.

### 3. 녹색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

지금까지 소개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녹색기업가 정신이다. 이는 녹색기술개발에 대한 도전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고, 녹색경영실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한 녹색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녹색시대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녹색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어둠 속에 나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견실한 등대처럼,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처럼 중소기업과 동행하며 최선의 역량을 다할 것이다.